

## Online Series

2016. 05.13. | CO 16-14

#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 (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오경섭(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

김정은 정권은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이하 사업총화보고)에서 통일전략과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제시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통일전략과 남북관계는 7만 2천자 분량의 사업총화보고에서 13%(9,500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총화보고에서 밝힌 통일전략과 남북관계에 관한 입장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3대 세습 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일전략과 남북관계는 1980년~90년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노선과 정책을 거의 그대로 유지했다. 통일전략은 김일성·김정일 통일전략의 판박이고, 남북관계는 우리정부가 자국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것을 전제로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압박했다.

## 김일성·김정일 시대 통일전략 답습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 정권의 통일전략을 그대로 들고 나왔다. 사업총화보고에서는 조국통일을 조선노동당의 “가장 중대하고 절박한 과업”이라고 규정하면서 통일노선과 투쟁방침을 제시했다. 조선노동당의 통일노선과 투쟁방침은 김정일이 1997년에 제시한 조국통일 3대헌장에 모두 담겨있다. 조국통일 3대헌장은 조국통일 3대원칙(1972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1980년),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1993년) 등이고, 모두 김일성이 제안한 것이다. 투쟁대상은 미국과 우리정부다.

조선노동당의 투쟁방침은 조국통일 3대현장의 핵심요지인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 평화보장과 연방제 실현이다. 가장 중요한 투쟁방침은 민족자주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을 한반도에서 축출하고, 우리정부가 미국과 결별해야 통일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족대단결은 통일을 원하는 모든 세력이 사상·이념·정견을 뛰어넘어 단결해서 미국과 우리정부를 타도해야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투쟁방침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통일전선전술이다. 김정은 정권은 평화보장과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을 전제한 평화다.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한다. 우리정부는 한미동맹을 절연하고,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해야한다.

김정은 정권의 통일전략은 김정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라는 논문에서 조국통일 3대현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1997년에 머물러있다. 김정은 정권은 왜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전략을 고수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통일전략이 김정은과 조선노동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이념적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은 미제 축출, 남조선혁명, 연방제 통일을 추진한다는 명분을 걸어놓고 김정은의 개인독재, 인민의 정치적·경제적 자유 억압, 인권 유린, 인민의 희생 등을 정당화한다.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혁명과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김정은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핵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선전한다. 김정은 정권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념적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할 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김정은 정권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일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새로운 통일전략도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 핵 보유인정·제재 철회해야 남북관계 개선 주장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평화협정 체결, 남북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했다. 첫째, 북한의 변화나 체제붕괴를 추구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심리전방송, 삐라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를 중지해야한다. 셋째, 국가보안법 철폐, 5·24조치 해제, 대북제재 중단 등 남북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각종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없애고, 관계 발전에 유익한 실천적 조치를 취해야한다. 넷째, 남북군사

당국회담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조국통일 3대원칙,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정부의 정책전환을 강하게 압박할 뿐 남북관계를 과국으로 몰아넣은 원인을 제공한 핵개발 중단에 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히려 핵보유를 전제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했고, 남북관계가 과탄한 책임을 모두 우리정부에게 떠넘기면서 대남비난을 쏟아냈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행위를 추종하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개발에 시비를 건다고 비난했다. 김정은 정권은 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하면서 우리정부가 완전히 굴복해야 가능한 대남 요구사항만 일방적으로 열거했을까? 김정은 정권은 어떤 남북관계를 원하는 것일까? 김정은 정권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우리정부에게 던진 메시지는 간명하다. 우리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자신들의 핵보유를 묵인하고, 모든 대북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대북유화정책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한 의도는 좀 더 복잡하다. 김정은 정권은 자국의 핵개발을 정당화하고, 미중관계의 틈을 벌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와해하고, 한국사회 내부에 남남갈등을 야기함으로써 정부의 대북정책을 흔들려는 속셈을 가지고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한다. 김정은 정권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북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랜 북핵 문제의 역사를 돌아볼 때,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핵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 논리에 불과할 뿐이다.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흔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평화협정을 주장한다. 한·미와 중국은 평화협정 논의에 대해 여전히 견해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조건에서 평화협정 논의에 부정적이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주장에 부분적으로 동조하면서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추진을 제안한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평화협정 논의는 한·미와 중국 간 틈을 벌림으로써 대북제재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게다가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우리 사회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논란을 키움으로써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이 사업총화보고에서 제시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이나 평화협정 주장에 호응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들은 대북제재 무용론이나 출구전략을 제기하면서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평화협정 논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의도를 고려할 때, 향후 남북관계는 매우 비관적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실험을 진행할 것이고, 우리정부는 대북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보유정책과 우리의 북핵 폐기정책이 극적 타협을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남북관계의 과국이 장기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정은 정권은 우리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각종 미사일 실험을 묵인하고 대북제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건에서 남북한이 군사회담이든, 평화협정 논의든 어떤 대화를 시도하더라도 대화를 위한 대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시간만 벌여줄 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고집하는 조건에서는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응이다. ©KINU 2016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